

분신 사망자 허세욱 씨의 마지막 절규

“한미FTA 중단하라”

“노무현은 퇴진하라”



허세욱 동지는 16년 동안 택시 노동자로 살아오며 민주노조 건설과 월급제 철폐 등을 위해 투쟁해 왔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정치적 운동에 헌신한 투사였다. 여중생 압사 항의 운동, 탄핵 반대 투쟁, 이라크 반전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평택 미군 기지 반대 투쟁 등에 그는 항상 앞장섰다. ‘그날이 오면’ 서점 대표 김동운 씨는 “서점 앞은 항상 동지가 가져온 포스터로 도배됐고 책상에는 동지가 가져오신 각종 투쟁을 알리는 선전물이 끊임 없이 없었지요” 하고 추억한다. 어렸을 때 서울로 상경해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 온 허세욱 동지는 철거 반대 투쟁을 겪으며 운동

에 동참했다. 그는 “빈민운동을 하던 여자 간사가 용역깡패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 뒤 많은 걸 깨달았죠” 하고 말한 적이 있다. 허세욱 동지는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민주노총 조합원이었고 NGO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참여연대’의 모범적인 회원이기도 했다. 그는 1백20만 원 정도의 많지 않은 월급 중 10퍼센트를 꼬박꼬박 당비·회비·지지금 등으로 지출했다. 그는 “1만 원 아껴 봐야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당에 1만 원을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1만 원 아껴 봐야 못 배운 한을 못

풀지만, 당에 1만 원을 내면 세상의 이치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어린 활동가에게도 꼬박꼬박 ‘동지’라고 부르며 존칭을 쓰던 그는 항상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번에 서울시당 대의원으로 출마하며 “한미FTA의 모순점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한미FTA를 몸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를 철저히 실천했다. 그는 택시를 운전하며 하루에 1백 장 정도의 한미FTA 반대 유인물을 승객들에게 나눠주며 토론했고, “나머지는 퇴근 길에 집집마다 돌렸”다고 한다. 그는 “한미FTA 반대 유인물을 주었더니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손님도 있었다”고 좋아했다. 그는 신문과 책에 밑줄을 쳐가며 한미FTA의 문제점을 탐구했고 분석했다. 그래서 직접 한미FTA를 조목조목 폭로하는 팸말을 만들어서 1인시위를 하고 집

회에 참가했다. 동지의 이같은 삶과 투쟁은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다. 허세욱 동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노무현 정부가, 동지의 시신을 빼돌리는 등 사망과 화장 과정까지 더러운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서는 허세욱 동지가 죽음으로 호소한 투쟁의 과제가 남겨졌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고인의 영정 앞에서 한미FTA 체결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동지는 4월 1일 분신 과정에서 화기가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무릅쓰고 계속 “한미FTA 폐기”와 “노무현 정권 퇴진”을 외쳤다. 강력한 대중 투쟁을 건설해 이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동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이정구 (고 허세욱 씨와 같은 민주노동당 관악지역위원회 당원)

알렉스 캘리니코스에게 듣는다

—신자유주의의 대안
—부시의 위기와
반전 운동
5~8면



한미FTA 반대 운동

—한미FTA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미FTA와 양극화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론
—한미FTA 반대
국회의원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23면



프랑스 대선과 좌파

9면

국민연금 개악을 중단하라

12면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열우당 이류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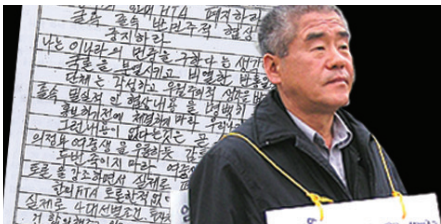
고려대 출교 조치 1년

11면

counterfire.or.kr
《맛볼》온라인 기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최근의 바그다드 그림자 내 자살폭탄 공격
은 미군 증파로도 달라지지 않은 이라크 상황
을 보여 줬다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4월 21일(토) 오후 7시 촛불 추도식

세종문화회관 앞(전국 동시다발)

한미FTA는 양극화 확대 · 강화 협정이다

강동훈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청와대 브리핑)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IMF 이후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각종 구조조정을 다시 한 번 가속화할 것이고 이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문제의 해답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일자리 확충에 있다. 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성장 전략이자 복지 전략”이라며 한미FTA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한미FTA로 서비스업 등이 확장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1994~2002년에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도 2천1백9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고, 그 중 1천6백만 개 이상이 서비스 일자리였다.

그러나 이 일자리는 ‘양질’이기는커녕 주로 식당종업원·경비원·파출부·노인부양인 등 저임금 직종이었다.

이 점에서, 최근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약법의 시행령을 수정하며 파견 허용 업종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넓히려 한다”며 현행 26개에서 50여개로 늘리겠다고 한 것은 시사적이다.

농업과 ‘취약’ 산업들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강 양극화 심화

한미FTA 협상을 타결하려고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수입을 허가해 식품 안전이 위협받게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비싸지만 안전한 먹거리로 이런 위험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건강을 해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식품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게다가 한미FTA는 약값을 대폭 인상해 평범한 사람들의 부담을 늘릴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제약업체가 만든 ‘아모디핀’이라는 고혈압 치료제는 다



IMF 경제 위기 이후 폐지 좁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났다
—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해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내몰 것이다

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의 ‘노바스크’를 약간 변형시켜 만든 개량 신약이다. 아모디핀의 약값은 노바스크의 75퍼센트 정도여서 환자들은 비교적 싼값에 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 타결로 특허-허가 연계 등이 도입되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배긴 복제약이나 유사한 개량 신약의 판매를 오랫동안 늦출 수 있다. 그러는 동안 환자들은 더 비싼 약을 사먹어야 한다.

결국 1년에 1조 원 정도의 약값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한미FTA는 물·전기·가스·교통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의 가격을 대폭 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FTA는 공기업도 민간 기업처럼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업적 고려’란 공기업이 정부의 공적 정책에 따라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노린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IMF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요금을 계속 인상에 왔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철도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KTX 여승무원 투쟁에서 보듯, 대규모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기도 했다.

최근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도 비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강행됐다.

요컨대, 한미FTA는 평범한 사람들이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요금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 개혁 ‘거부권’

노무현은 “13년 동안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의한 [멕시코 정부의] 보상액이 3천만 달러 정도라면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ISD는 단순히 보상액으로만 그치지 않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은 ISD에서 제외됐다고 말하지만, ‘주택·토지 공개념’ 제도나 ‘1가구 1주택 법제화’가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법률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해 무상의료를 시작하는 것 등도 기업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돼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공공 정책에 대한 ‘기업의 거부권’을 주는 것으로 사회의 진보적 개혁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재협상’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

한미FTA 협상 미국측 대표인 웬디 커틀리가 재협상을 주장하자,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웬디 커틀리는 “재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한 적 있느냐”고 발뺌하면서도 “노동 등 FTA 관련 기타 조항들에 대해 … 한국과 적절한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사실, 미국 의회 의원 일부가 “구속 노동자를 풀어주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한 것이나 미국 정부가 노동권과 환경권을 들먹이며 재협상을 꺼내는 것은 노동자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노동권·환경권 등은 미국 정부가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을 압박할 때 쓰는 카드일 뿐이다.

노동부장관 이상수조차 “미국과 한국의 노동시장을 보면 오히려 미국이 더 후진적인 분야가 많다”고 말할 만큼 미국의 노동조건도 본질적으로 형편없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미FTA와 관련해 한국에 요구했던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노사관계로드맵과 같은 내용이었다.

물론 미국의 노동권 추가 협상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전경련이 “지난해 통과된 노사관계로드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정말 풀볼전이다.

이윤을 위해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던 자들이 국제 노동기준 준수 요구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모습은 한미FTA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협정인지를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재협상’을 통해 어느 나라의 ‘국익’이 더 훼손될 것인지 따지는 것도, 노동권·환경권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부질없다. 협상과 재협상 모두에서 양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소수 기업주와 부유층의 이익일 뿐이다.

오로지 한미FTA 타결 무효만이 노동자·민중의 삶과 생존권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인용해도 될까요?

“한나라당의 대북노선이 중도에서 보수로 불안정하게 널뛰기를 하고 있다. … 초식동물이 육식을 하는 격이다. 그러면 광우병에 걸린다.”

— 열우당 민병두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 “노동자와 한나라당이 함께 세상을 바꾸자.”

한국노동부위원장 김성태: “친노동자 후보와 굳건한 정책 연합으로 당선을 돕고 집권 기간 중에 도 도울 것”

—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범식의 코미디

“제3지대론은 제1지대를 제3지대인 양 위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이들이 먹는 과자도 이렇게는

안 만든다. … 옛날 제품을 섞어 만든 것에 새로운 겉포장을 하겠다는 것”

— 범여권의 이합집산을 비판하는 노회찬 의원

“위원장이 되신 지 두 달째인데 대화와 협상을 잘 하겠다는 뜻이 국민들 사이에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 그런 것이 국민 경제에 좋은 사안을 보낸 것 같다.”

— 민주노동 이석행 위원장을 칭찬하는 경총 회장 이수영

재판장: “방청객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법정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김명호 교수: “이렇게 X판인 재판정도 없다.”

— 당당하게 법정 투쟁하는 석궁 사건의 김명호 교수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해 메이데이는 전국 집중 집회가 돼야 한다

김용민

“노무현 정부는 이제 개헌도 중단하고 한미FTA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실제로, 4월 14일 노무현은 개헌 발의 유보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한 FTA 국회 비준을 위해 개헌도 포기한 셈이다.”

아니나다를까 협상 타결 이후의 ‘밀월’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하던 “노무현·보수언론·한나라당이라는 신자유주의 3각동맹”의 다른 파트너들은 안도와 칭찬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민주당·통합신당추진모임 등도 개헌 발의 유보를 반기며 “한미FTA 마무리에 올인”하라는 격려를 잊지 않았다. 이들은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다루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노무현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물러설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신자유주의 3각동맹”의 공세에 맞설 만만찮은 저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3월 투쟁의 가장 큰 정치적 성과가 있다면 그 투쟁을 거치면서 활동가들이 한미FTA 반대 투쟁에 대한 장기적 시야와 함께 상당한 정도의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도 확대·심화됐다.

현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본)는 5월 중순 협정문 공개 시점, 6월 말 협정 체결 시점, 9월 정기국회 비준 동의 시점, 11월 대선 국면 등에 맞춰 대중 투쟁을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원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선전·교양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부문 별… 설명회·토론회·보고회” 등을 열기로 했다. 또, “지역운동본부와 부문별 공대위의 조직 정비·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한미FTA 반대 투쟁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FTA 반대 운동은 더욱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층에서 공동전선의 건설과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2005년 프랑스에서 신자유주의적 유럽헌법을 부결시킨 운동의 경험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사실 유럽헌법 찬반 국민투표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럽헌법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그 뒤 반신자유주의 운동, 금융 투기를 규제하는 아탁(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 공산당, 사회당 좌파,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등이 뭉쳐 지배계급의 선전 공세에 대항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1천 개가 넘는 지역 위원회와 그룹들이 결성됐고, 모임과 토론이 끝없이 조직됐다. 바로 이러한 기층의 조직이 유럽헌법 부결 운동에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

노동계급

프랑스 유럽헌법 부결 운동의 또 다른 주요 교훈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민투표를 앞둔

2005년 2월과 3월 프랑스 노동자들은 임금 등 노동조건 방어를 위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벌였고, 이것은 프랑스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결정적으로 왼쪽으로 이동시켰다. 프랑스에서 유럽헌법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처음으로 앞지른 게 바로 이 즈음이었다.

이 점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앞으로 민주노총이 한미FTA 반대 투쟁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매우 반갑다.

물론 중요한 것은 말이 행동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석행 지도부가 이번 노동절(메이데이) 행사를 수도 서울에서 전국 집중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분산할 거라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미FTA 문제를 산업별·부문별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 “지난 2일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한미FTA 협상이 각 산업·업종별로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산별연맹 차원의 투쟁”(〈민중의 소리〉4월 9일치)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산업·부문별로 노동자들을 파편화할 것이고, 한미FTA로 피해가 크지 않거나 이익이 기대되는 듯한 산업·부문의 노동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각 산업·부문의 기업들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 한미FTA는 산업·부문을 떠나서 전체 노동계급에 구조조정과 공공서비스 악화, 비정규직화의 피해를 줄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산업별·부문별 이해득실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이해득실을 근거로 한미FTA 반대를 설명하며 계급적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옳다.

노동자들이 투쟁의 선두에 설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한미FTA를 막아내고 “신자유주의 3각동맹”을 물리칠 수 있다.

한미FTA 반대 국회의원들을 백안시해야 하는가?

한미FTA 반대 운동의 성과는 한미FTA를 찬성해 왔던 자들의 ‘전향’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예컨대 김근태나 천정배가 그렇다.

이 국회의원들은 지금 대체로 ‘한미FTA 협상 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에 속해 있다. 그리고 시국회의는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진보적 사회원로들과 협정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는 ‘한미FTA 저지 국민회의’(가칭)로 확대·발전할지도 모른다.

운동의 일부는 이러한 사태 발전(주류 정치권 일부의 ‘전향’과 운동 가담)을 외연과 저변의 확대에 이해해 환영한다. 반면, 운동의 다른 일부는 이러한 “제휴”가

“어불성설”이라며 불쾌해 한다.

이런 경계와 불신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한미FTA 반대 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좋건 나쁘건 곳곳이 자리를 지켜 온 골간 지지자들의 활동 덕분이었다. 그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정부의 거짓말을 논박하고, 집회·행진에서 매번 팻말을 들고, 각종 모임을 위해 장소를 잡는 등 온갖 굵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온 사람들이다.

반면, 최근 ‘전향한’ 주류 정치권 인사들은 대부분 한미FTA 반대 여론이 한껏 고조되기 직전까지 정부의 운동 탄압에 동조하거나 기껏해야 침묵했다. 따라서,

“대체 지난 1년 동안 당신들은 어디서 뭘 했나? 우리가 왜 당신들을 신뢰해야 하나?” 하고 묻는 건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이들을 운동에서 배척하는 것은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격일 것이다.

매번 운동이 고조되고 성장할 때는 과거에 수동적이었거나 심지어 운동의 목표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새로이 운동에 가담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운동의 저변 확대를 뜻하고 따라서 흔히 기존 운동 참가자들의 사기를 높인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도 환영할 만한 발전이다. 언론의 조명을 받기 쉬운 국회의원들은 운동

이 더 광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시국회의’나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한미FTA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벌인다면 이는 우리 운동의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는 데 유리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그리 신뢰할 만한 세력이 못 된다. 따라서, 운동은 이들을 이용하되 의존하지 말고 기층의 대중 행동을 강화·유지하는 데 강조점을 뒀야 한다. 무엇보다, 운동은 이들 ‘전향한 의원들’이 운동의 목표와 대의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주장과 태도를 보일 때, 가차없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정치적 독립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열우당 아류 지지를 위한 것?

김인식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위원장)

3월 31일에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진보진영 단일 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 지도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부분적으로는 단일 후보 마련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인 듯하다. 당 지도부는 대부분 민주노동당과 다른 단체들이 자체 후보를 확정한 뒤에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연합 결성은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9월) 이후의 과제로 여긴다.

물론 그것도 진보진영 단일 후보 선정에 이르는 한 경로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경로를 밟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단체들이 자체 후보 선출에 열중하면 선거연합 논의가 소홀해질 위험도 있다.

선거연합 논의가 지연될수록 열우당 붕괴에서 비롯한 기회를 놓칠 위험도 커진다. 벌써부터 열우당과 그 아류들은 잃어버린 기반을 재탈환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예컨대, 한미FTA에 대한 기회주의적 태도 변화가 그렇다. 따라서 열우당의 와해가 낳은 공백을 메울 진보진영의 선거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내 선거연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좀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선거연합에 대한 정치적 이견 때문이다.

당내 PD 계열 그룹들은 대체로 선거연합에 부정적이다. ‘전진’ 소속의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이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표방했지만 ‘전진’ 그룹 내에서는 아무도 그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연합이 가져올 민주노동당(과 ‘전진’)의 사태 장악력 약화 우려, 민주노동당이 아직 집권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 등 부정적 견해가 유력한 듯하다.

연립정부

‘해방연대’는 민주노동당이 ‘미래구상’과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것은 노동자 정당의 “정체성 상실”이자 “우향우”라고 비판한다(〈해방연대〉 22호).

‘미래구상’의 주요 인사들이 열우당 일부와 연합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미래구상’의 계급 연합 구상을 추수해서는 안 된다. 선거연합은 진보진영이 열우당의 개혁 배신에 환멸을 느낀 개혁 염원 대중에게 정치적 구심점을 제공하려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구상’과 열우당은 다르다. ‘미래구상’을 단순한 ‘열우당 아류 집단’으로 여기는 것은 ‘미래구상’이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개혁 염원 대중을 내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열우당과 그 아류들이 저지른 대표적 개혁 배신에 항의하는 사람들 — ‘개혁 배신자’들과의 선거연합은 대중적 지지 기반을 축소할 것이다

뜻밖에도 ‘해방연대’와 비슷한 비판이 자민통 계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경순 진보운동연구소 소장과 황혜로 〈인터내셔널〉 편집장은 선거연합을 ‘비판적 지지’의 변종이라고 비판한다.

박경순 소장은 민주노동당이 “제도 정치권 정치 세력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옹계 주장한다.

“제도 정치권 정치 세력들이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시민운동 세력들은 어느 모로 보나 개량주의, 계급화해 노선을 극복하지 못한 정치 세력들이며, 이들과의 정치연합이나 선거연합은 … 민주노동당의 정체성마저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주체적 대선 전략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

실제 당 내에는 ‘반보수대연합’을 통한 연립정부 구성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박경순 소장이 잘 지적했듯이, 이것은 확실히 “과거의 ‘비판적 지지’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3월 31일 중앙위원회에서 ‘다합

께’가 제출한 사업계획 수정안 중 ‘진보의 기준’이 삭제된 것도 열우당과 그 아류들에 대한 태도 문제 때문이었다. 자민통 경향 중 상당수는 ‘다함께’가 제시한 세 가지 진보의 기준 중 “한나라당과 열우당과 그 변종 등 주류 정치 세력의 일부여서는 안 됨”을 무척 깔끄러워했다.

그렇다고 박경순 소장이 “제도 정치권 정치 세력들”을 일관되게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진보대연합의 후보로 결정되고, 제도 정치권 일부 세력들이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 운동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민주노동당 강화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후보가 아닌 제도 정치권 후보가 진보대연합의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보대연합’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노동당 후보가 ‘진보대연합’의 후보가 된다면 “제도 정치권 일부 세력들”과도 함께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동

당이 “독자적 후보 전술”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혜로 편집장은 민주노동당이 “독자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만한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진보대연합’에 대해 부정적이다. 황혜로 편집장도 민주노동당 후보가 진보대연합 후보가 되지 못할 경우를 우려한다. “당선 가능한 개혁 후보에 밀리고 마는 그 어떤 게임도 결국은 헛이고 높다.”(‘진보대연합을 말한다’, 《이론과 실천》 2007년 4월호)

계급 연합

두 사람 모두 선거연합은 “제도 정치권 정치 세력”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민통 경향이 간직해 온 정치 전통의 유산 — 계급 연합 즉 인민전선 전략 —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민주노동당은 아직 “제도 정치권 정치 세력”(또는 그 일부)을 견인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선거연합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부르주아 ‘개혁파’들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미래구상’이 선거연합의 전제조건으로 일부 ‘자유주의 개혁 세력’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이를 분명하게 거부해야 한다. 설령, 선거연합이 무산될지라도 노동자 운동을 약화시킬 계급 연합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열우당과 그 아류들을 배제하면 선거연합이 협소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훈 ‘미래구상’ 전략기획단 간사는 “우리 안에서 뭉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한다. 이영희 민주노동총 정치위원장도 열우당을 배제하자는 것은 “진보진영 대단결 하자면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목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주장이다. 선거연합은 올해 대선에서 노무현과 열우당의 배신에 맞서 진보진영이 공동으로 정치 대안을 내놓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쟁과 신자유주의 추진 때문에 대중의 불신을 받는 세력들과 진보진영이 함께한다면 이를 어떻게 새로운 정치 대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집권 자체가 목표인 양 착각해 — “자유주의 개혁 세력을 포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지금중 ‘미래구상’ 사무총장) — 열우당과 그 아류들과 연합한다면 선거연합의 대중적 지지 기반은 오히려 축소될 것이다.

정치 양극화로 붕괴 상태인 범여권 세력을 진보진영이 애써 되살려 놓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범여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영향력을 더 약화시켜 완전한 붕괴를 재촉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그러려면 진정한 진보 세력이 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반전 운동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적 운동으로 만듭시다”

[편집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활동가이며 《반자본주의 선언》, 《미국의 세계 제때 전략》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맛볼〉 편집팀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에 참석한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만나 인터뷰했다.

미국의 조지 부시 정부는 계속 이란에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이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미국이 당장 이란을 침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부시 정부가 아직 이라크 증파를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부시 정부는 새로운 이라크 전략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이란 침략은 주의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또, 부시 정부는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상하원이 내년을 이라크 철군 시한으로 정한 것은 부시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시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대규모 정치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시 정부가 이란을 공격할 적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란 침략 위협이 진정한 위협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에서 실패해 곤경에 처해 있고, 무슨 짓을 해도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만약 부시 정부가 후퇴하고 타협한다면, 중동에서 미국의 지위가 약화할 수 있고, 특히 이란의 세력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만약 부시 정부가 이란 공격을 포함해서 폭력적인 위기 타개책을 찾는다면, 이는 더 큰 패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 정부는 쓸 수 있는 대안이 죄다 나쁜 대안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시 정부는 미군 증파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시의 이라크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부시의 증파가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바그다드에서 폭력 사건 수가 줄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힘을 감안할 때 이는 특별히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이라크 저항세력이 ‘미군과 전면 충돌하기보다 조용히 기다렸다가 미군 수가 줄어들면 다시 활동해야지’ 하고 판단했다면, 이는 매우 합리적 대응입니다. 저는 이라크 게릴라들이 이런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드르와 지지자들은 이미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사드르시티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했고, 미군과 충돌을 피했습니다. 언론들은 많은 마흐디군 최고

지도자들이 이라크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시 동안 숨어 있겠다는 전략이죠.

다른 한편, 일부 수니파 저항세력들은 미군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 공격의 일부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라크 상황은 상당히 모순돼 있습니다.

저는 16만 명의 미군이 이라크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적개심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네오콘들은 부시가 애당초 많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고 비판하지만, 미국은 베트남에 60만 명을 파병하고도 패배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는 정치적 동역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점령군이 현지 주민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얻어 게릴라들을 고립시키지 못하거나 현지 주민들을 분열시키지 못한다면 점령군은 패배할 것입니다. BBC의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이라크인의 절대 다수가 점령군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 증파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맛볼〕 웹사이트에 실린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칼럼



미국의 이라크 침략 4년 향의 시위, 이라크 나자프 – “이라크인의 절대 다수가 점령에 반대합니다”

‘미군 증파로도 전환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참조]

최근 미국에서 반전 운동이 부활한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국제 반전 운동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 반전 운동은 불균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03년 2월 15일 시위는 진정한 지구적 반전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이라크 침략 초기인 2003년 3~4월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반전 운동은 세계적 운동으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주요 반전 단체들은 옛 평화 운동 출신입니다. 옛 평화 운동은 냉전기 핵무기 반대 운동에서 등장했고, 주로 평화주의적 정서를 갖고 있었으므로 제국주의 문제에 정치적으로 대응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전쟁을 벌이고 흔히 이슬람의 깃발을 들고 투쟁하는 사람들에 맞서 싸우는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옛 평화 운동 출신 반전 운동 지도자들은 “바그다드가 함락됐으니 전쟁도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도 나라마다 반전 운동을 약화시킨 특정한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사례는 미국과 이탈리아의 사례입니다.

2004년에 대다수 미국 반전 활동가들은 존 케리[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케리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케리를 지지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케리가 선거에서 패배하자 반

전 운동의 사기가 크게 저하했습니다. 지난 6~9개월 전부터야 미국 반전 운동은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매우 중요한 몇몇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반전 운동은 유럽에서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정당과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이탈리아 반자본주의 운동의 미사여구에도 이탈리아 반전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재건공산당과 민주좌파당(DS)[각각 옛 이탈리아 공산당 좌파와 우파의 후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정당이 [프로디의] 중도좌파 정부에 입각한 후 한편으로는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결정을 실행해 이라크 주둔 이탈리아 군대를 철군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이탈리아 군 병력을 증강시키자 이탈리아 반전 운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3년 전에는 1백만 명 이상이 반전 시위에 참가했지만 얼마 전에는 겨우 3만 명만이 참가했습니다. 아주 큰 타격을 입은 것이죠.

반전 운동의 규모를 지속시킨 나라의 반전 운동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전쟁의 성격을 이해했습니다. 이 전쟁이 단지 영토를 차지하려는 부시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의 장기 전략에서 시작됐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이해가 있었을 때 반전 운동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정치적 이해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와 동시에, 종파적이지 않은 광범한 공동전선을 통해 운동을 실제로 건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이론을 아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운동을 건설한다는 관점이 없었습니다.

» 8면으로 이어짐

신자유주의의 대안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대안이 없다”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 이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려면 민주적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6년 7월 호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당(SMP)의 중앙위원이자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의 유럽학 교수이고,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미국의 세계 제재 전략》 등 많은 책을 썼다.

2006년 5월 천연가스의 국유화를 선언하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반란의 물결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유럽에서 이 점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곳은 프랑스다. 프랑스에서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신자유주의 유일사상(뺑세 위니끄)이 두 번이나 아찔한 패배를 경험했다. 첫째는 유럽연합 헌법 찬반 국민투표에서 좌파들의 반대 운동이 승리한 것이고, 둘째는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최초고용계약법(CPE)에 반대하는 사회적 반란의 성공이었다.

그러나 이런 승리들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훨씬 더 날카롭게 제기했다. 대안세계화 운동이 실질적 성공을 거둘수록 이 운동에 대한 지겹게 오래된 비난, 즉 대안세계화 운동(다른 세계를 향한 운동)은 단지 현 상태를 반대할 뿐 독자적인 대안 강령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늘어나고 있다.

운동의 일부는 이런 도전에 대처하려고 노력한다. 예컨대, 프랑스 국민투표 뒤에 대안세계화 운동의 활동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유럽 헌법의 대안으로 “다른 유럽의 원리 헌장”을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파린체 회의에 이어, 최근 아테네 유럽사회포럼의 한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금까지 작성된 헌장 초안은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 초안은 기존의 인권을 확장해서 일련의 “공동된 사회적 권리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사

회적 권리들은 예컨대 공공 서비스가 초국적기업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이 초국적기업들은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사유화 정책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 헌장은 전후 사회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틀 안에 있다. TH 마셜은 그의 고전적 에세이에서 지난 2백 년 동안 시민권 개념이 시민적 권리(예컨대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에서 정치적 권리(특히 보편적 참정권)를 거쳐 사회적 권리(예컨대 교육·사회복지·교육)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과정을 추적했다. 신자유주의적 “반(反)종교개혁”[반동]은 근본적으로 전후의 복지국가[사회보장제도]로 대표되는 사회적 권리들을 제거해서 이 시민권 확장 과정을 되돌리려는 노력이다.

사유재산에 도전하기

이런 맥락 속에서 볼 때 이 사회적 권리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권리들을 지키는 것과, 이 권리들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라고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널리 유행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아주 순수한 형태의 자본 논리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상품으로 변모한다. 이런 논리를 거부하려면 다른 사회적 논리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현장은 이 사회적 논리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한 가지 핵심 문제는 소유권이다. 모든 것이 상품으로 변모해야 한다면, 개인과 기업이 그런 상품 — 유전자 같은 추상적 재산도 포함하는 — 을 소유할 수 있고 남들은 그런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배제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돼야 한다.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금융 기구나 세계무역기구(WTO)가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제의 주된 취지 가운데 하나가 절대적 사유재산권의 강화·확장이다.

그렇다면 대안세계화 운동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대안세계화 운동은 세계를 기업들과 부자들의 개별적 재산으로 만들려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설 대안으로 어떤 소유 개념을 제시하는가? 이것은 단지 학술적 문제가 아니다. 2006년 5월 1일 볼리비아의 새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군대를 보내 석유·천연가스 시설을 장악하게 하고 탄화수소 산업을 다시 국유화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석유·천연가스] 산업 국유화는 2005년 5~6월 우파 대통령 카를로스 메사를 축출한 민중항쟁의 주된 요구였다.

사실, 많은 대안세계화론자들은 이런 요구[국유화]를 불편하게 여긴다. 지난해 10월 나는 멕시코시티의 팍 막힌 도로 위 미니버스 안에서 승객들 — 전 세계에서 온 지식인들과 활동가들 — 이 서로 열띤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은 볼리비아 운동이 국유화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지 그

른지를 둘러싸고 논쟁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 속에서 위의 “원리 헌장” 초안은 소유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무린다.

“이런 공공 서비스의 기능과 토양·대기·물·에너지 같은 공공재의 사용은 사회적 소유 프로젝트의 실행이 필요하다.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화를 고안해야 한다. 국가 소유나 정부 소유가 아닌, 그리고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공공 서비스의 조직·기능·구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소유 말이다.”

이렇게 일그러진 정식화는 여러 언어가 사용되는 운동이 안팎으로 소통하기 위해 흔히 영어를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서 비롯한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유화에 대한 의심의 이면에는 동구권에서 스탈린주의가, 서구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도입한 관료적 국가 소유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더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존 홀러웨이의 유명한 책 <권력을 잡지 않고 세계를 바꾸기>[국역: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갈무리] 제목에 요약된 자율주의 이데올로기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국가를 잊어야 하고, 신자유주의의 지역적 대안들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유화

홀러웨이의 태도는 일반적 전략으로서는 가망 없는 것이다. 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도 가망 없기는 마찬가지다. 볼리비아인들은 탄화수소 사유화의 폐기를 원한다. 이것은 탄화수소 산업을 랩솔YPF나 페트로브라스 같은 외국의 다국적기업들한테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불가피하게 이것은 소유 문제를 제기한다. 먼저, 국유화가 아닌 대안은 없는 듯하다.(굳이 들자면, 모랄레스가 1백 퍼센트 국유에 못 미치게 국유를 복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국가는 탄화수소 산업 장악처럼 뭔가 야심찬 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강제력과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가진 국민적 기구이다. 더욱이, 그 정당성은 국가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행세할 수 있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따를 수도 있다. 볼리비아 대중운동의 압력만 하다면 말이다. 사회주의운동당(MAS) 지도자 모랄레스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탄화수소 국유화 요구에 사실상 반대했다. 그 조치를 그에게 강요한 것은 그를 권좌로 밀어올린 운동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의 낡은 실수를 되풀이해야 한다가거나 기존 국가를 진보적 사회 변화의 주요 주체로 여겨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대중의 압력에 반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국가는 자본의 지배를 유지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무엇보다 대중의 참여·주도력·통제를 배제하는 관료적·위계적 방식으로 조직된다. 이 때문에 혁명적 맑스주의 전통은 자본에 반대하는 혁명이 성공하려면 그 국가를 파괴하고 그것을 기층의 민주주의 기구로 대체해야 한다고, 그래서 노동대중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해 왔다.

따라서 국유화 자체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공공 자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매각된 뒤에

한 나라의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중 반란 때문에 뭔가를 되돌리는 조치를 실제로 취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 뭔가가 단지 낡은 것만도 아니었다. 모랄레스 정부가 석유·천연가스 산업을 장악했을 때 세계의 정·재계 권력자들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른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말이다.

이런 경험은 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 자동맹(LCR)의 앙트완 아르투(Antoine Artous)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확인시켜 준다. “특정 소유관계를 당장 전복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심각하게 수정하지 않은 채 사회 변혁의 역동성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르투는 더 나아가 국유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소유라는 개념 전체를 단지 소유권의 법률적 이전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 분업(생산의 위계적 편제)에 대한 도전과 그것을 협력적 생산 형태로 대체하는 것을 전제한다.”

시장이나 계획이나

사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논리와 정밀로 단절하려면 국유화의 경제 확장과 민주적 자주관리 형식들의 도입이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유 산업의 노동자들은 그 산업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단지 학술적 문제만은 아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령 우고 차베스가 미국에 대항하며 ‘21세기의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그 곳에서는 상황의 급진화 때문에 대안적 경제 편제 형식이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의미는 또 다른 금기를 깨뜨리고 단지 국유화뿐 아니라 계획에 대해서도 말한다는 것이다. 1930년대 이래로 계획은 옛 소련과 그 종속국들의 관료적 지령경제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계획이 엄청난 위세를 떨쳤고, 그래서 인도 같은 탈식민지 국가들의 모방 대상이 됐다. 옛 소련의 쇠퇴와 몰락 이후 계획은 철저한 불신의 대상이 됐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됐다. 널리 유행하는 정설 경제학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를 가운데 일부 — 중국과 남한 — 이 국가 개입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은폐한다.

계획에 대한 반감 때문에, 심지어 자본주의의 대안을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조차 모종의 시장경제를 피할 수 없다고 여긴다. 이 점은 예컨대 철학자 데이비드 밀러와 경제학자 존 로머(John Roemer)가 옹호하는 시장사회주의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시장사회주의에서는 집단적으로 소유된 협동조합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심지어 맑스주의 철학자인 토니 스미스(Tony Smith)조차 그의 신간 <세계화: 체계적인 맑스주의적 설명>[Globalisation: a Systematic Marxian Account]에서 시장을 민주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전략에 내재한 근본적 문제점은 어떤 시장경제든 필연적으로 경쟁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시장경제에서는 자원의 할당이 기업 간 경쟁의 의도치 않은 결과이다.(그 기업들은 공동으로 그러나 비(非)집단적으로 경제를 지배한다.) 다시 말해, 각 기업이 할당받는 몫(자원의)은 그들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

비스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했는가에 달려 있다. 자원 배분 방식을 둘러싼 사회 전체의 집단적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기업이 경쟁에서 패배하면 그 기업은 자신의 자원을 잃고 파산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개별 단위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비를 절감해서 상품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체계적 압력을 받는다.

당연히, 이런 구조는 경제 전체 수준에서 민주적으로 조직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적 이든 아니든 자원 할당을 둘러싼 집단적 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개별 기업 안에서도 민주적 조직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 점은 <지넷>(ZNet)의 마이클 앨버트가 아주 잘 설명했다. 어떤 노동자 통제 기업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조직되지만 그 생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치자.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파산을 피하려면 대체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기 임금을 깎고, 노동조건 악화과 노동강도 강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매우 낮은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비용 절감 및 생산 증대 정책을 실행할 경영진을 고용하는 것이다. 반면 그 경영진 자신을 그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서 보호하면서 말이다. 실제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 따라서 시장에는 노동인구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강한 압력이 존재한다. 두 집단이라 복종하는 다수와 결정을 내리는 소수다. 후자는 더 많은 소득과 권력을 향유하고, 자신들이 남들에게 강요할 비용 절감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논리는 시장경제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민주주의·평등의 고립된 섬들을 침식하고 마침내 침몰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시장을 민주화할 수 있다고 믿는 로머와 스미스 같은 사회주의자들도 그들 나름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의 작동에 온갖 규제를 가해서 시장이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못하게 막거나(이 경우에 그들이 제안한 원리들에 따른 경제는 봉괴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경쟁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경쟁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다가 자신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파괴할 것이다.

파레론

이것의 함의는 모를지기 신자유주의의 지속가능한 대안이라면 시장이 아니라 민주적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모델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앨버트의 파레론(참여경제)이다. 참여경제에는 노동자 평의회나 소비자 평의회가 있다. 이런 평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자원의 몫을 제출해서 점진적 조정 과정(앨버트는 이것을 “반복”이라고 부른다)을 거친다. 한편, 기술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다.

이 모델의 주된 약점은 자원 할당 요구가 개별적 수요에 따라 좌우되는 시장경제의 작동 방식을 너무 많이 모방한다는 것이다. 앨버트는 아나키스트인데, 분권화에 대한 그의 열정이 여기서는 너무 멀리 나아갔다. 사회적 자원의 할당은 가치 중립적인 기술적 문

»8면으로 이어짐

» 7면 ‘신자유주의의 대안’ 기사에서 이어짐

제가 아니다. 그것은 모종의 집단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정치적 문제다. 그런 결정은 흔히 사회적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국의 좌파 경제학자 팻 드바인(Pat Devine)이 제시한 이른바 협상 조정 모델이 더 우월하다. 여기서 자원 할당은 대체로 생산자와 소비자와 이해당사자 집단이 서로 논의한 결과다. 그러나 경제적 우선순위에 대한 전반적 결정의 틀 안에서, 그리고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된다.

물론 민주적 계획에 대해 할 말은 — 무엇보다, 할 일이 —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앨버트와 데바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계획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시장을 거부한 경제가 어떻게 민주적이면 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보여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자 국가

그러나 자본주의와의 단절은 완전한 계획경제로 순식간에 도약한다는 형식을 취할 수 없다. 오래 전에 맑스는 《고타 강령 비판》에서 새로운 노동자 국가가 물려받을 사회는 자본주의의 오점이 깊이 새겨진 사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에 노동자 국가는 낡은 질서와 타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차 “능력에 따른 노동,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공산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본주의와 단절된 사회라면 우선순위를 경쟁의 무계획성에 내맡기지 않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경제로 결정적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을 통제하고, 노동자 통제 아래 핵심 경제부문을 국유화하고, 부(富)와 소득을 부자에게서 빈민에게로 분배하는 누진세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확장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조처들은 비록 급진적이지만, 여전히 시장경제의 많은 측면들을 간직하고 있다. 규모가 큰 부문들은 여전히 민간의 수중에 있을 것이다. 경제 전체를 민주적 계획의 원리에 따라 전환하려면 지속적인 압력과 새로운 조처들이 필요

할 것이다. 한 가지 핵심 조처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를 위한 최상의 방법은 보편적 직접 소득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이 비교적 낮지만 어지간한 수준으로 자신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을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에 이바지할 것이다. 첫째, 기존 사회복지 제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 복지 수준을 높여 줄 것이다. 자녀가 있거나 신체 장애가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남들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본 소득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둘째, 기본 소득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무슨 일자리든 닥치는 대로 구해야 하는 압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자본주의의 주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 — 노동자들에게는 임금노동 말고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것 — 가 제거되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힘의 균형이 고용주의 본성과 무관하게 노동자들에 유리한 쪽으로 바뀔 것이다.

더 크게 보면, 권력 문제가 결정적으로

2007년 1월 코차밤바의 민중의회
— 민주적 계획 경제를 성취하려면 새로운 종류의 권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요하다. 내가 방금 간략히 설명한 구상에서 분명한 과제 하나는, 변화의 방향이 시장 자본주의나 옛 소련에서 특세한 국가자본주의로의 복귀가 아니라 민주적 계획경제를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정치 권력이라는 지렛대를 노동자들 스스로 통제하는 것뿐이다.

권력을 위한 투쟁

국가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 — 관료적으로 조직되고, 위계적 구조로 짜이고, 국가 기구를 운영하는 자들의 이해관계가 자본의 이해관계와 서로 맞물려 있는 — 을 취하는 한은 사회의 어떤 개선도 일시적이거나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홀러웨이 등이 옹호하는 국가 무시 전략이 어리석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적 계획경제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면, 기존 국가와 대결해서 그것을 분쇄해야 한다.

이 과제는 다른 종류의 권력을 발전시켜야만 이룰 수 있다. 이 권력은 노동자들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의 자체 조직을 토대로, 그들이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나온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의 노동자·병사 평의회부터 1978~79년 이란 혁명기의 노동자 쇼라에 이르기까지 20세기의 위대한 혁명 운동들은 이런 권력을 언뜻언뜻 보여 주었다. 2003년 10월과 2005년 5~6월 볼리비아 민중항쟁 당시 운동이 만들어낸 자체 조직들을 보면, 오늘날 반신자유주의 운동들도 이런 종류의 권력을 창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계획경제는 자주관리 사회일 것이다. 그 사회에서는 작업장과 지역사회에서 직접 선출된 평의회들이 자신들의 일상사를 책임지고 서로 연계해서 사회 전체를 위한 결정들을 내릴 것이다. 1871년의 파리 코뮌을 보며 맑스가 얻은 핵심 통찰은, 이런 조직 형태들이 새로운 사회 건설 전에 낡은 사회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자주관리 사회의 토대가 될 이 자체 조직은 피착취·피억압 대중이 자본 자체에 저항하고 마침내 자본 자체를 전복하는 데도 필요하다.

자본을 전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과정이다. 앨버트는 시장경제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딜레마에 부딪힐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여전히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민주적 계획 원리를 도입하기 시작한 사회가 직면할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 똑같은 딜레마가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의 변질과 궁극적 패배의 원인이다. 세계의 어느 한 곳에서 뚫린 돌파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 돌파구가 계속 확산하고 점차 세계 규모로 자본의 논리를 전복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비현실적 공상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자본의 세계화 때문에 저항도 세계화했다. 세계의 각지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치아파스와 시애틀은 세계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프랑스의 위대한 반(反)CPE 투쟁은 그리스 학생 운동을 고무해서 우파 정부를 패퇴시키는 데 일조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운동들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모두의 등대가 됐다.

심지어 한 나라에서도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면 많은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받지 않는 시장에 반대하는 세계적 저항은 단지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견해를 의제로 복원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대안을 쟁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 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기사에서 이어짐

따라서 전 세계 반전 운동의 상황은 불균등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먼저 각자의 나라에서 반전 운동을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 반전 운동의 부활을 고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 실제로 다시 한번 전 세계적 운동이 되도록 말입니다.

미국 제국주의가 이라크 전쟁으로 위기에 처하자 일부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독자적 활동을 펼쳐려 합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이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와 같은 양상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뜻합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경제

대인 유럽·일본·중국의 사례를 봅시다.

이들 국가의 지배자들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유럽연합에는 그러고 싶어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서 내부적으로 분열해 있죠. 특히 독일에서 미국과 영국에 우호적인 우파 인사가 집권하자 유럽에서 대서양주의자의 영향력이 2~3년 전보다 좀더 강해졌습니다.

둘째,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잘 알다시피 일본 지배자들은 미국 제국주의와의 동맹 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일본 지배자들은 이 동맹 관계를 이용해 헌법에서 평화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강화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 제국주의의 강화는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도전보다는 오히려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배자들은 나중에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동맹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합니다.

최근 미국 제국주의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일례로, 푸틴은 최근 연설에서 미국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경제가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주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치솟은 결과인데, 그 덕분에 에너지 공급자로서 러시아의 지위가 강해졌습니다. 러시아 지배계급은 러시아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하자 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 푸틴은 러시아 국가를 재편해서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켰습니다. 푸틴은 지정학적으로 좀더 독립적인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당장의 전략으로

삼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주요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미래에 심각한 경쟁 관계로 발전할 중요한 갈등들을 볼 수 있지만, 이들 열강의 지배계급 어느 누구도 미국 제국주의와 ‘균형’(국제 외교 전문가들이 쓰는 표현이죠)을 맞추고 이에 맞서는 동맹을 건설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5년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실패한 미국 제국주의 권력의 한계가 드러나자 많은 국가들이 미국 제국주의와 독립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직 노골적인 경쟁과는 거리가 멉니다.

※ 인터뷰 전문은 <맞불> 웹사이트를 보시오

좌파 진영 분열의 아쉬움

4월 22일의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는 모두 12명이지만, 그동안 주류 언론들은 우파 후보 니콜라 사르코지, 사회당의 중도좌파 후보 세골렌 루아얄, 중도우파 자유주의자 프랑수아 베이루 등 주류 정당 후보 3명과 극우 파시스트 후보 장마리 르펜의 움직임을 주로 보도해 왔다.

주류 정당 후보들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그들은 모두 신자유주의 ‘개혁’을 지지하고, 제국주의적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해 유럽 헌법(2005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된)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의 체제에 불만이 많은 도시 청년들, 특히 대도시 근교 이민 가정의 청년들을 길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르코지는 강력한 이민 규제와 치안 정책을 주장하며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루아얄은 이른바 ‘문제 청년들’을 강제 징집해 신병 훈련소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프랑스가 미국 제국주의의 단순한 꼭두각시 구실을 해서는 안 되고, 유럽연합에서 프랑스의 독자적 발언력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 직전 유엔 안보리 논쟁 같은 미국 제국주의와의 노골적 갈등을 피하고 이런 문제에서 친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본가들은 우파 후보인 사르코지를 당연히 선호한다. 이는 루아얄의 정책이 사르코지보다 좌파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루아얄이 자신의 지지 기반 때문에 신자유주의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고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흔들릴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의 중도우파 일간지 <더 타임스>는 “사르코지가 프랑스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 최고의 희망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우세로 2차 투표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FN)의 후보 르펜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상당 부분 주류 후보들 덕분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민 규제 공약을 내세우자 르펜의 입지가 강화됐다. 현재 르펜은 12 i 15퍼센트의 지지율로 4위를 기

록하고 있다.

반면, 6명의 좌파 후보들(트로츠키주의자 2명, 공산당 후보 1명, 반세계화 운동가 후보 1명, 녹색당 후보 1명, 기타 좌파 후보 1명)은 상대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프랑스 노동자·청년·학생·농민의 정서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후보는 바로 이들이다. 그 중에서도 대중의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후보는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올리비에 브장스노이다.

브장스노는 “우리 삶이 기업주들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구호 아래 월 최저임금 50퍼센트 인상, 공공주택 공급증대, 대중교통 무료화, 주 32시간 노동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런 공약들은 1995년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2003년 교사 파업과 라르작 반WTO 시위, 2005년 유럽헌법 부결과 대도시 근교 이민 청년 항쟁, 2006년 CPE(최초고용계약법) 저지 투쟁 등으로 급진화한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그 때문에 브장스노의 선거 유세 분위기는 마치 전투적 시위처럼 뜨겁다. 브장스노가 루앙 유세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한 번 쓰고 버리는 클리넥스 티슈

지난해 최초고용계약법(CPE) 반대 투쟁에 참가한 LCR의 올리비에 브장스노

나 즈을 찢 뒤 버리는 레몬즙으로 생각한다”며 자본가들을 비난했을 때 1천여 명의 지지자들은 엄청난 환호를 보냈다.

브장스노의 지지율은 공산당 후보인 마리조르주 뷔페나 ‘반세계화 운동’ 후보인 조제 보베보다 높다. 현재 유권자의 40퍼센트에 달하는 부동산층의 다수를 이루는 급진화한 청년 노동자와 대학생들 중 적잖은 수가 브장스노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대중적 호응이 2005년 유럽헌법 부결이나 2006년 CPE 저지 투쟁처럼 프랑스 정치 지형을 뒤흔들 성과로 연결되기는 힘들 듯하다.

상상력

급진화한 대중조차 르펜과 사르코지 같은 우파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견제 심리 때문에 브장스노나 다른 좌파 후보에게 선토틈 표를 던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대중은 울며 겨자 먹기로 루아얄을 찍거나, 과거 사회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에서 ‘중도파’ 베이루에게 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기권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좌파 진영의 책임도 크다. 만약 이들이 유럽헌법 부결과 CPE 저지 투쟁 후의 분위기를 이용해 좌파 단일 후보 마련에 성공했다면 사르코지나 루아얄과 함께 주목받을 후보는 극우파 르펜이 아니라 좌파 단일 후보일 것이다.

좌파 후보 5명의 현재 지지율만 단순 합산해도 르펜의 지지율보다 높고, 좌파 단일 후보 마련 실패 후 울며 겨자 먹기로 루아얄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20퍼센트의 지지율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프랑스 대선 지형을 크게 왼쪽으로 이동시켰을 것이고, 1995년 공공부문 파업 이후 급진화해 온 대중이 유력한 정치적 대표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는 좌파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각종 반전·반신자유주의 대안들이 전국적 이슈가 되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프랑스 좌파들이 선거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다. 연말 대선을 앞둔 한국의 진보 진영은 프랑스 좌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용욱

미국이 북한의 대(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을 허용하다

부시 정부 대북 제재의 위선

얼마 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위선 덩어리임이 드러났다. 지난 4월 7일 <뉴욕 타임스>는 올해 1월 미국이 북한의 대(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고 폭로했다. 에티오피아는 T-55탱크 부품 등 2천 만 달러 상당의 무기와 부품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강경한 대북 제재 목소리를 높여 왔다. 미국은 유엔이 대북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도록 만들었고, 이 결의안 제8조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자신이 이 결의안을 무시했다.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 에티오피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에티오피아를 부추겨, 소말리아에서 친미 정부를 위협하는 이슬람 반군을 진압하도록 했다. 이런 미국의 위선적 대북 제재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용인한 것은 미국 제국주의가 가진 힘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라크 수렁에 빠진 미국은 세계 전역에서 벌어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점점 지역 강패 국가들의 힘을 활용하려 한다. 이 때문에 지역 강패 국가 지배자들의 이익을 완전히 거스르기 힘들어졌다.

또, 이라크 문제에 묶여 중동 바깥으로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없는 미국이 자칫하면 북한과 충돌할 수도 있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을 강행하는 데 많은 부담을 느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은 북한 지배자들이 진정한 반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라는 점도 보여 주었다. 북한 정권은 무슬림의 민족해방 투쟁을 분쇄하려는 소말리아 친미 정권과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한 에티오피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미국의 폭격기와 북한제 탱크가 결합한 공지 합동 전술로 무슬림을 학살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따라서 <자주민보>가 “제3세계에서 갈수록 북의 무기 수입을 늘려 가”는 것이 미국의 “군사 패권을 중심에 둔 제국주의적 세계 지배 전략을 수정”하게 만든다고 옹호한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다. 북한의 대(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은 미국의 제국주의에 도움을 줄 뿐이다.

한규한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량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인종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매일노동뉴스〉 기사가 오보였길

지난 3월 26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의 ‘현장 대장정’ 첫날 새벽 인력 시장에서 건설 일용노동자들을 만난 얘기가 3월 27일자 〈매일노동뉴스〉에 실렸다. 이석행 위원장이 그곳에 많이 있던 이주노동자들과 반갑게 악수하고 얘기하는 소식이 없어 아쉽기도 했지만 아연실색할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이석행 위원장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힘들지요?” 하고 물은 뒤 “건교부 장관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 내용만 보면,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들린다.

민주노총에 확인한 결과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쓴 김학태 기자는 오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 기사나 추가 기사를

쓸 계획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말처럼, 이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이기를 바란다. 이주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우리 이주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이고, 한국인 노동자들과 단결을 통해 전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간질

한국 정부와 지배자들이 우리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고 써먹는 이런 분열 논리에 민주노총이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건설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의 근본 원인은 불법 도급과 다단계 하청 문제임이 명백하다.

최근 민주노총과 금속산업노조가 이주노동자 조직화 문제에 대해 진지

한 고민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려면, 한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 속에서 단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점에서, 지난 3월 12일 이석행 위원장이 건교부 장관 면담 자리에서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 인원·대상을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 강화를 요구한 것은 우려했다.

이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주들의 전횡을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의 기사가 잘못된 것이라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주장과 실천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소식/보고

전진하는 청소년 운동

4월 14일,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집회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가 열렸다. 집회의 주요 요구는 두발·용의복장 전면 자유, 체벌·폭력 금지, 핸드폰 등 소지품 검사·압수 반대, 입시신분제 중단이었다.

1백20여 명의 청소년 대부분이 인터넷 홍보나 등·하교길 전단지 등을 보고 처음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청소년들의 자유 발언은 자신감이 넘쳤다.

자유 발언대의 청소년들은 “우릴 공부만 하는 기계로 만들려고 한다. 공부가 아니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민주주의? 모두 거짓말이다! 학교는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명령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인가?” 하고 말하며 그동안 쌓인 분노를 터뜨

렸다. 한 청소년은 자신의 잘린 머리를 보이며 “머리 길다고 공부 못 하나, 말도 안 된다”며 성토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해 징계를 받은 이용석 선생님도 집회에 참가해 “‘학생답지 않은’ 학생들을 좋아한다.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청소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교육부와 장학사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활기차게 구호를 외치며 교육부 앞으로 행진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풍선을 교육부 담장 안으로 넘기려 하자 경찰은 청소년들을 밀치며 막으려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위축되지 않고 계속 구호를 외치며 “경찰은 청소년기가 없었냐”고 항의했고, 결국 풍선을 교육부 담장 안으로 넘길 수 있었다.

거리에서만이 아니라 학내에서도 이런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전날인 13일에도 세민정보고에서 1백여 명이 두발 자유·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시위를 했다.

이 운동이 ‘3불정책 폐지’ 등 입시 경쟁 강화 시도에 반대하는 운동과 결합된다면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슬기·박조은미

포럼

서울대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일시: 4월 25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사회대 16동 104호
문의: 011-9001-1843

성공회대
KTX 민세원 지부장에게 듣는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투쟁
일시: 4월 26일(목) 오후 7시
연사: 민세원(KTX 열차 승무지부 지부장)
문의: 010-3346-8030

〈맛불〉 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 02) 2271-2395으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농협 100037-66-119794

우리은행 1002-130-549338

하나은행 197-910005-87207

기업은행 066-042771-01-012

신한은행 308-12-498840

우체국 011726-02-123945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다.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사회 진보를 향한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편집자] 고려대 당국의 반교육적 출교 조치 이후, 6명의 출교자들(강영만·김지윤·서범진·안형우·조정식·주병준)은 본관 앞 천막농성을 1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다. 아픈 몸을 이끌고, 심지어 수술을 앞두고도 밝은 얼굴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김지윤·주병준 동지를 만났다. 두 동지뿐 아니라 고군분투하며 초인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6명 동지 모두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지윤 동지

저는 원래 무릎이 안 좋았는데 천막에서 계속 좌식 생활 해야 하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서 힘들었어요. 얼마 전부터 무릎을 못 펴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파열됐다고 수술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하면 무릎을 못 쓰게 될 거라고.

1년 동안 싸우면서 대중적인 지지와 행동,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모금해 줄 때마다, 지지 성명이 나올 때마다 너무 고맙고 집회 나와 주는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진정으로 학교에 커다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단호하게 싸우는 행동이 뒷받침될 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진짜 강력한 투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연을 넓히면서도 우리 원칙을 잃지 않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과하라는 압력이 엄청 많았는데, 사과해선 안 된다고 마음을 굳혔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울까, 돌아가서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사과해서 복적이 된다고 해도 이런 진보적인 활동이 고대에서 계속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같이 싸워왔던 친구들이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진보 활동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어요.

출교당하고 나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오히려 사회 진보 활동에 대한 확신과 지지가 더 강해졌어요. 학교를 상대로 승리하고, 또 사회 진보를 위해 함께 싸우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대학 신자유주의화의
글로벌 리더
고려대학교에 맞선 저항

주최: 출교 철회
천막농성 1주년 사업단

(1) 4월 27일(금)
- 후원주점: 오후 6시, 민주광장

(2) 5월 2일(수)
- 고려대 강수돌 교수에게 듣는다
“시장주의 고려대가 아닌 민주주의 고려대를 찾아서”
: 오후 6시, 장소는 추후 공지

(3) 5월 3일(목)
- 출교 철회 천막농성 1주년 촛불집회
: 오후 6시, 민주광장

※ 후원: 하나은행 391-910196-7507 (강영만)
※ 문의/연락: 011-9090-7366(강영만)
011-9560-3357(조정식)

“학생운동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천막농성을 쫓 해오다 한 달 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사흘 정도 입원했는데 일찍 나왔어요. 지금도 좀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서 누워 있어요.

다들 1년 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가슴 한편으로 자부심도 있어요. 학생운동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어윤대 총장이 쫓겨난 게 가장 기뻐던 일이에요. 출교 문제가 어윤대 총장한테

타격이 컸으니까요.

이제 곧 1년이라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법정공방도 있을 거예요. 학교 측 조정안이 ‘사과하고 개개인이 전부 반성문을 공개 발표하면 고려해 보겠다’였어요. 판사조차 그건 조정이 아니라고 답답해 했어요.

[학교 측] 변호사가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무회장님이 반성

문을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학생처장도 면담 때 ‘이건 교육의 문제로 풀 수 없다. 언론과 기업과 교우회에서 난리다’고 했죠.

그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게 명백하죠. 진짜로 이 문제는 협소하게 감금이나 아니냐를 뛰어넘었던 문제거든요.



주병준 동지

지지와 연대가 확산돼야 한다

고려대 당국이 7명의 학생들을 출교시킨 지 1년이 지났다. 그에 맞선 저항도 꼬박 1년이 됐다. 출교 학생들은 1년 동안 천막 농성을 하며 건강이 엄청나게 나빠졌지만 출교 1년을 맞아 저항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1년 전 고려대 당국이 학생들을 쫓아낸 표면적 이유는 교수 억류 사건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이 학생들은 고려대 당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앞장서 맞서 싸운 투사들이었다. 이들은 고려대와 병설 보건대의 통·폐합 과정에서 자행된 보건대 학생 차별에 반대해 함께 투쟁했고, 고려대 당국이 삼성 이견회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려 한 것에 앞장서 반대했다.

이 학생들은 대체로 2002년 여중생 사망 항의 운동과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으로 급진화한 세대들이다. 이들은 전쟁 반대 운동을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과, 또

대학 내 운동과 연결하려 했다.

그래서 고려대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 학과 간 차별 반대 운동, 학생 자치 활동 탄압 반대 운동 등이 벌어졌다. 더 정치적인 요구들도 있었다. 이견회 학위 수여 반대 운동,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운동, 전쟁 반대 운동,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 등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들이 동료 학생들과 함께 건설한 여러 투쟁들은 학교 당국의 신자유주의적 대학 운영에 종종 제동을 걸었다. 이 때문에 고려대 당국은 이들을 강경 탄압해서, 고려대 학생운동을 위축시키려 했던 것이다.

저항

그럼에도 출교 학생들은 굽히지 않고 저항에 나섰다. 출교 철회 투쟁과 함께 고려대의 신자유주의화에 맞선 투쟁도 지속했다. 학생들의 저항은 신자유주의 대학 경

영의 선두에 있는 고려대 당국에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고려대 문과대 교수들은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하며 고려대를 비롯해 “무차별적 시장 논리와 효율성에 대한 맹신이 팽배”해 있는 신자유주의 대학들을 공개 비판했다. 11월에는 출교 탄압의 장본인이자 고려대 신자유주의화의 선봉장이었던 전 총장 어윤대가 총장 선거에 재출마했다가 학생들의 재임 반대 운동에 부딪혔고, 교수들의 투표 결과 꼴찌에서 2등으로 낙마했다. 이필상 전 총장의 논문 표절 비리는 고려대 당국의 처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고려대 당국은 출교 철회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천막 농성장 철거 협박을 하는가 하면, ‘출교’ 관련 강연회나 진보적 강연회를 불허하곤 했다.

그동안 출교 조처가 ‘교육적’ 처사라고

우기던 고려대 당국은 최근 출교 조치의 진정한 배후를 드러냈다. 학교 당국은 “이것은 이미 교육학적 문제가 아니다. 보수언론과 교우회, 기업 등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집단이 엉켜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출교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이렇듯 오늘날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와 권위주의화는 이 사회 지배자들이 추구하는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고려대는 대학도 기업의 입맛에 따라 운영되기를 바라는 이 사회 지배자들의 욕망을 구현하는 실험장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은 출교 학생 당사자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해결하는 투쟁일 뿐 아니라,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에 맞선 저항을 고무하는 상징적인 투쟁이다.

출교에 맞선 저항이 시작된 지 1년을 맞아, 출교 학생들은 투쟁을 더욱 확대하려고 있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학생들은 출교 학생들의 영웅적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연대 활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병호

국민연금 개악 중단하라

국민연금법 개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각 당 원내대표들은 “4월 25일까지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 잡재 부채가 8백 억 원,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연금 개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학교 교수는 “연금발전위원회의 보고서 (2003년)에 따르면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9퍼센트와 60퍼센트에 고정시키더라도 2050년 국민연금 지급총량은 GDP의 7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 논리를 반박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정부 개악안대로(보험료 12.9퍼센트, 급여율 50퍼센트) “하더라도 이른바 ‘잡재 부채’는 하루에 6백50억 원에 달한다.”(〈오마이뉴스〉, 김보영)

무엇보다 건강보험은 ‘기금’을 쌓아두고 있지 않지만 해마다 20조 원을 지출(국민연금은 2조 5천억 원)하면서도 흑자를 내고 있다. 기금을 얼마나 쌓아두는가 하는 문제

는 연금의 미래와 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 개정에 조바심을 내는 까닭은 전혀 다른 데 있다. 지난 IMF 경제 위기 직후 국민연금이 확대 실시될 당시 〈동아일보〉가 펴낸 주간지 〈NEWS+〉(1999년 6월 10일)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국민연금 제도가 확립되면 민간 사보험 시장은 죽게 된다. 2030년 뒤 국민연금 기금으로 모일 돈의 규모는 5백조 i 1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국내 최대급 사보험사가 움직이는 돈 규모가 35조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규모나 폭발력을 짐작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삼성생명 등 대형 사보험 회사들이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수익률을 가진 국민연금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미FTA 협상에서도 사보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등 공적 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의 다른 노림수도 있다. 연금 개악에 성공해 그동안 누적된 2백조 원의 기금을 보전하거나 더 늘릴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법인세 감면에 따른 정부 재정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

2001년 당시 건강보험 재정이 정말로 고갈되자 김대중 정부와 언론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노동자들에게 지갑을 열라고 했고 결국 노동자들의 보험료만 대폭 인상해 빚을 갚았다.

그러나 부자들의 보험료를 제대로 거두고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주지만 않았더라도(연간 2조 5천억 원) 노동자들의 보험료 인상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40년 뒤에 있을 재정 고갈을 근거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뿐 아니라 설사 재정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각지대 해소가 훨씬 시급하다. 현재 비정규직의 70퍼센트 가까이 국민연금에서 배제돼 있다.

그러나 열우당이나 한나라당의 온갖 미

사여구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이들은 사각지대의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을 확대시켜 온 장본인들이다.

사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덜 받는 국민연금법’ 재발의”(〈조선일보〉 4월 17일치 헤드라인)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은 사실상 형편없는 기초연금만 남겨둔 채 국민연금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가장 악질적인 시도의 일부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재회는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안대로 하면 재정안정은 더 멀어진다”며 급여율을 40퍼센트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지난 번처럼 정부의 재정 고갈 협박에 타협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 개악을 묵인·방조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 개악 저지에 앞장서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덜 내고 더 받는’ 진정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재정은 민주노동당이 지난 몇 년 동안 주장해 왔듯이 부유세 등 부자들과 기업주들에게 세금을 거둬 마련해야 한다.

장호중

‘일심회’ 중형 선고

앞뒤도 안 맞는 마녀사냥을 당장 끝내라

기어코 법원이 ‘일심회’ 관련 구속자들에게 9년~4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심회’라는 이적단체 구성,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등 검찰의 주요 기소내용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고도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법원은 “최초 조직원이 4명에 불과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며, 자체 강령과 규율도 없었고, 서로 조직원인지 알지도 못했고, 일심회라는 조직 명칭도 몰랐”으

므로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이적단체 구성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6·15 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으로 부풀린 ‘일심회’는 결국 “단체”로 보기도 힘든 실체 없는 것이었음을 법원조차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들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거의 절반 이상 무죄 판결했다. 유죄로 판결한 부분조차 “국가 안보를 위협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과 모순되게도 법원은 피고인들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공당인 민주노동당 내에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세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등 범행의 비밀성과 위험성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노무현이 비밀리에 “교사”하고 통일부가 “주선”해 베이징에서 북한 참사 이호남을 “접촉”한 안희정에게는 과태료조차 부과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똑같이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접촉했지만 ‘일심회’ 관련자들은 많게는 10년 가까이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이것은 ‘일심회’ 재판이 구역질나는 이중잣대로 우리 운동을 마녀사냥하는 ‘여론조작용 재판’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문건들을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적 표현물 소지’ 유죄로 판결한 것도 기가 막힐 일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 역시 토론할 문제이지 결코 옥살이시킬 일은 아니다. 어디서든 누구든 북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전달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일심회’ 마녀사냥의 추악한 본질이 더욱 분명해졌다. 구속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조승희